

'쌀' 해방이후 첫 수출길 열린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국산 쌀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자칫 쌀 시장 개방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쌀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농림부가 쌀 수출 허가를 방한을 바꿨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최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되면서 쌀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림부는 8일 쌀 수출을 요구하는 이원일 덕양농산영농조합(경기도 고양시) 대표에게 농림부 장관 추천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 수출 의사 타진을 해온 4~5개 업체에 대해

농림부, 민간업체 요구에 허가 방침 품질 좋은 친환경쌀 200t 스위스로

서도 문서상으로 요구를 해올 경우 면밀히 검토해 수출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출을 위해서는 현행 양곡관리법 제12조에 의해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쌀 시장 개방 거부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쌀 수출을 허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했

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검토 단계가 끝나면 곧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자급률이 낮았던 1980년대까지 정부는 쌀은 물론 쌀 가공식품도 수출을 금지해왔다. 90년대 들어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쌀 자급률이 100%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쌀 수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쌀 가공식품의 수출만이 허용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거부의 명분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최근 한·미 FTA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마한 가지의 이유로 쌀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쌀 소비 감소 등으로 공급에 다소 여유가 생겨 일부 업체들이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쌀 수출 제도 및 절차 정비를 검토해왔고 이번에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 고양시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재배하다 지난해 9월 스위스로의 수출길을 잡았다. 이 대표는 "스위스의 소형 마트에 농산물을 대주는 현지 도매상과 접촉하게 되면

■쌀 재고량과 대북 지원규모 (단위:1000t)

연도	재고량	지원규모
2000	975	300
2001	1221	
2002	1297	400
2003	923	400
2004	850	400
2005	817	500
2006	1011	400(예정)
2007		

자료:농림부·통일부

서 쌀 200t 수출 계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쌀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월등히 뛰어나는 게 도매상들의 설명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덕양농가 이외에도 2000t 가량의 쌀에 대해 수출 문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천톤 가량의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쌀은 품질면에서 강점이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기자 unipark@kwangju.co.kr

“고액권 CD·ATM 사용 제외”

재경부 검토...현금거래보고제 폐지도

고액권을 일정 기간 현금인출기(CD), 자동인출기(ATM)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2천만원인 현금거래보고 제도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에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2010년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와 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健保에 진료비 확인 신청하면

부당 청구비 돌려 받을수 있다

혹시 병원 측이 병원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걸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들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비 용어를 대신 심사하고 평가해 부당하게 환자에게 돈을 받은 게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으면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게 제도의 기본 취지다.

진료 받은 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진료받은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진료비 확인요청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팩시밀리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역시 실명으로 신청서를 쓴 뒤 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민원상담부(02-705-6571~4)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1부(02-705-6510~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소비자 업무 외부인사 손에

공정위장 등 전문가 공모... 정부정책 새바람 기대

한국소비자원장,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최근 정부 내에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로 채워지고 있어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정부 소비자정책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8일 재경부와 공정위,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로 격상한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사급)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서 접수를 위한 공고를 냈다.

지원 자격은 공무원 경력사유가 없고 소비자안전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원은 오는 21일부터 5일간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공정위가 개방형 외부 공모를 통해 운영해 인하여 소비자안정센터와 함께 정부 소비자정책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이승신 소비자원장이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도 외부 공모로 선발되는 등 정부 내 소비자정책 관련 직위가 개방형 공모로 전환되면서 외부인사의 선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3명은 각각의 기관에서 최초의 여성 본부장, 원장, 과장이라는 기록을 수립하며 조직에 입성한 바 있어 정부 소비자정책에서 '여성파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



한국 국제용접기술전 개막

용접 자동화 설비 및 레이저 가공 기술 등 최신 용접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7 한국국제용접기술전'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용접기 업체 직원들이 스테인리스 용접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기술전은 1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1,000만원만 있으면 사채 갚는데...

사금융 이용자 절반이상 “자활 가능”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1천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5천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53%가 1천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를 정리하고 자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채정리와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나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원인은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와 병원비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65%를 차지했으며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41%, 가계생활자금 39%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생활자금 용도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이 2004년 20%, 2005년 36%에 이어 계속 증가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금융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 181%,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17%로 나타났으며 대부업체상한금리인 연 66%를 초과해 돈을 빌린 이용자 비율은 73%에 달했다.

2005년 조사 때와 비교해 등록업체 이용시 금리는 167%에서 181%로 상승했고 무등록업체 금리는 230%에서 217%로 하락해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간 금리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연령은 30대 44%, 20대 32%, 40대 17% 순으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의 비중이 52%를 차지했다.

회사원의 비중은 2004년 41%, 2005년 45%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원)생과 공무원의 비중도 각각 5%와 3%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대기업 '고용있는 성장'

최근 5년새 일자리 20% 늘려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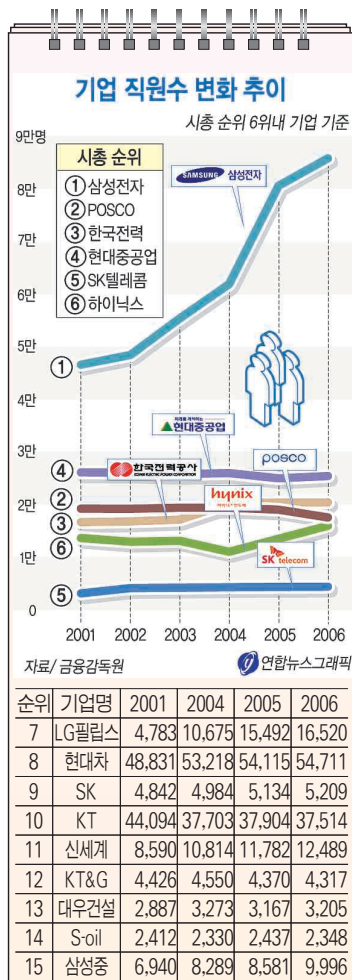
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위 내 상장사들(비교 불가능한 롯데쇼핑 등 일부기업과 금융사 등 제외)의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 2001년 말 31만119명에서 지난해 말 37만2천403명으로 20.1%가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는 3.8%의 순증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이들 기업체에 신규 취업한 직원수에서 각종 사유로 퇴직한 직원수를 제한 순증치를 보여 주는 것인 만큼 실제 신규 취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는 최근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도별로는 2002년 직원 수는 31만2천164명으로 전년에 비해 0.7%(2천45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03년에는 2.1%(6천521명)가 늘어난 데 이어 2004년엔 4.9%(1만5천680명), 2005년엔 8.1%(2만7천78명)가 각각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2006년에는 상승폭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1만960명이 늘어나 3%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이 지난 5년간 꾸준하



게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직원수는 같은 기간 4만6천570명에서 8만5천813명으로 3만9천243명이 증가해 무려 84.3%가 늘었으며, 연평균으로는 13.4%가 증가해 30개 기업 연평균 직원수 증가율 3.8%를 훨씬 웃돌았다.

/*연합뉴스

은행권 을 임단협 돌입

은행권이 올해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이 돌입했다. 특히 은행 창구 영업시간을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8일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공동 임단협 요구안을 의결했다.

금융노조가 9일 은행 측에 요구안을 전달하면 은행은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부터 교섭

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조합원의 과도한 노동강도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창구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기존 임단협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불만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창구 이용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거점은행을 설치하고 단축된 영업시간에는 자동

창구 영업시간 1시간 단축 '관심' 정규직 임금 9.3% 인상 요구

화기 이용수요를 대폭 인하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그밖에 ▲상시적인 사용자 교섭단체 구성 ▲조합재정자립 기금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선역제 폐지 및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장 ▲금융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금인상률은 한국노총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은 9.3%, 비정규직은 18.2%(총액 기준)를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3개지구 '한국아델리움' 공동 분양

한국건설이 광주지역 최초로 원금보장제를 도입한 문흥, 풍암2차, 운림 등 3개 지구의 '한국아델리움'아파트 공동분양에 나섰다.

원금보장제는 입주시 아파트 가격이 분양금보다 하락할 경우 조건없이 계약해지 및 원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로,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등의 계약 조건과 맞물려 수요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양물량은 문흥 333세대(43·48평형), 풍암2차 194세대(44평·49평형), 운림 88세대(51평형) 등 총 615세대로, 3곳 모두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다.

풍암2차는 풍암지구 내에서도 입지조건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히며, 문흥은 지난 13년간 신규공급이 없었던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운림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이 뛰어나다. 견본주택은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한국건설통합주택전시관에 마련됐다. 문의 1577-8733.

/*최경희기자 choice@